

# 농림부 종돈산업대책 무슨 내용 담고 있나

- 종돈업 전문화 유도... 선발체계 강화
- 4P질병 예방 위해 GGP 분만돈사 시설 개선
- 검정 수태지 손실 보전... 시세차익 50% 지원

◆... 농림부는 FTA 체결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 속에서 미래 생명산업의 성장 동력인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가축개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증축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하면서 종돈업 전문화 유도과 함께 종돈의 선발체계 강화에 초점에 맞춰 추진키로 했다. 이에 본지는 농가 이해를 돕고자 종돈 관련 대책을 정리·게재한다. <편집자 주> ...◆

홍보부

## ■ 국내 종돈업 현황

국내 종돈업은 전문 종돈장(GGP·GP종돈장)과 일반 종돈장간에 기능 구분이 제대로 안 되는 등 전문성이 낮고 체계적인 돼지개량 시스템과 국가단위의 육종프로그램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각 나라들이 종돈 유전자원 선점을 위해 육종 경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우리 고유의 품종개발 연구가 미흡하고 종돈을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다.

또한 일부 종돈장의 경우 시설이 노후화되고 위생·방역 관리수준이 낮음에도 행정력 부족으로 이에 대한 지도·관리가 소홀한 상황이다. 정액처리업체 역시 대부분 경영규모가 영세하고 적정 필요 숫자보다 많아 우수한 유전자원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농림부는 종돈산업 발전을 위해 △종돈업 전문화 유도 및 종돈 선발체계 강화 △종돈장 등의 방역·위생 관리 강화 △경쟁력 있는 종돈산업 육성 등의 기본방향을 토

대로 대책을 마련했다.

<표 1> 종돈업체수

구분	전문종돈장		일반종돈장 (혼합)	계
	원종돈(GGP)	종돈(GP)		
종돈업체수	16개소	52개소	75개소	143개소
사육두수	4,665두	23,365두	34,969두	62,999두

<표 2> 최근 5년간 종돈수입물량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종돈 수입	1,380두	1,238두	793두	1,324두	1,647두 (45개업체)	2,271두 (62개업체)

## ■ 돼지개량 네트워크 구축 - 우량 종돈 선발 이용

농림부는 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돼지개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방침아래 우량 종돈을 선발·이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0년까지 개량종의 경우 원종돈 모든 1백두(전체 5백

두), 재래종은 모든 50두(전체 2백50두) 규모 이상의 원종돈(GGP)을 보유하고 있는 규모화된 종돈장을 각 5개소씩 검정종돈장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유색종(부계계통)인 듀룩과 버크셔, 재래종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되, 희망할 경우 백색계통도 가능하다.

또한 가칭 '돼지유전평가원'이라는 독립법인체를 설립하고 검정 종돈장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전정보 수집·분석·평가와 기술 지도를 담당케 할 예정이다. 준비단계 1년은 종축개량협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08년 1월부터 신설기구에서 전담한다. 평가시스템은 캐나다 CCSI(돼지개량센터)를 벤치마킹해 구축할 계획이다.

선정된 검정 종돈장은 암돼지 80%이상, 수돼지 20% 이상을 검정토록하고 네트워크를 통한 검정·유전평가 자료, 개량정보를 교류하게 된다. 또 검정축에 대한 고유번호를 부여해 개체 관리하며 유전능력이 우수한 공유 씨수돼지 집단을 확보, 인공수정용 정액을 공급키로 해 사업시작 후 6~7세대에 이르러서는 우수종돈의 선발과 이용이, 8~10년부터는 신품종육성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농림부는 수돼지 검정에 따른 손실을 줄이기 위해 검정완료 수돼지에 대한 시세 차액의 50%를 검정 사례비로 검정 종돈장에 지원할 방침이다.



### ■ 전문화 유도 종돈업 등록기준 강화

종돈장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농림부는 국내 종돈업의 각 기능이 구분

이 안되는 등 전문화가 정착되지 못함에 따라 종돈업의 등록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종돈 1두 이상이면 등록이 가능했던 원종돈업(GGP)의 등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단일품종에 대해 50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다만 등록기준과 시기는 종돈 관련 생산자단체와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나 장기적으로 순종돈 단일품종 100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전문종돈업체(GGP+GP)에서 우량 종돈을 체계적으로 생산·분양토록 해 현재 종돈수요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공급률을 6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또한 원종돈 집단을 보유하고 집단유전평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종돈장을 중심으로 내년 6월부터 돼지 유전평가원에서 국가단위 집단유전능력평가를 실시한다. 또한 독자적으로 유전능력평가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형 종돈업체는 자율적으로 유전능력 평가 및 종돈개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종돈업의 씨돼지 분양에 따른 혈통서 발급을 내실화 하고 원종돈업체의 경우 검정기록이 기재된 혈통서 발급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종돈장의 검정참여를 높이기 위해 검정참여도(복당 7두)가 높은 업체에 대해 종돈 MMA양허관세 적용물량 배정과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 ■ 종돈장 위생, 질병관리 강화

종돈·정액유통업에 대한 위생·질병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특히 전염병 질병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사육장의 출입차량 소독조,소독장비를 설치, 업체 자율 방역을 강화하고 예방접종과 소독기록부 비치를 의무화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에서 종돈업체별 위축 공수의사를 지정 '질병·위생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우수 종돈업체와 정액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위생등급 인증제'와 '우수업체인증제'를 각각 활성화 해 내 실화를 다질 계획이다.

만성소모성질환(4P) 발생 억제를 위한 종돈장 시설 개선도 진행된다. 우선 원종돈업체의 분만 돈사 시설개선비를 지원(모든 두당 40만원)하고 종돈 생산은 성장 단계별로 2~3site로 분리사육 토록 한다.

또 PMWS(이유후전신소모성증후군),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PRDC(돼지복합호흡기질병), PED(유행성설사병) 퇴치를 위한 컨설팅과 백신적종을 유도하고 거래용 종돈혈통서에 접종여부 기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종축장·정액처리업에 적용되는 '방역·위생관리요령'을 개정 고시 하는 등 질병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 경제능력검정 확대 및 AI센터 운영 개선

돼지 육질과 관련한 경제 형질이 검정항목에 추가된다. 농림부는 마블링, 육색, PH(산도), 보수력, 전단력 등 육질관련 경제형질을 검정항목에 추가해 육질관련 형질 평가를 강화하여 선발지수식(Index)에 의한 검정시스템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수요 변화 추이를 고려한 돼지 개량목표를 설정하고 검정을 올해 6만두에서 2010년 7만두로 확대키로 했다.

종돈검정소의 기능도 강화와 시설확충도 추진한다. 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의 혈연관계 연계를 통해 검정종돈장간의 유전능력을 비교 평가하고 형질이 우수한 종돈을 선발토록 한다. 또 종돈검정소의 노후화된 시설을 현대화 해 검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방역과 위생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종돈의 혈통관리, 개체식별, 검정에 관한 업무 편람을 개발, 배포하고 혈통서 발급제도를 보완해 유전능력 평가결과 기록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한편 핵돈군 AI센터 육성 기반도 마련된다. 농림부는 축산연구소의 돼지인공수정센터를 핵돈군 AI센터로 육성키로 하고 유전평가 결과 최우수 씨돼지를 품종별 5~10두씩 보유, 핵돈군 유전자 공유를 통해 종돈개량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또한 종돈검정소에서 검정결과 유전능력이 뛰어난 수퇘지를 인공수정용으로 이용해 우수 유전자를 널리 확대시킬 계획이다. AI 센터간의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구조조정과 경영 내실화를 유도하여 정액처리업의 우수업체 인증제도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 종돈 해외시장 개척, 수출 확대

종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물류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종돈 항공운송시 일반화물비해 200%가 적용되는 운송비를 일반화물로 분류해줄 것을 건설교통부와 협의키로 하고 수출선적포장비와 운송비 일부 지원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수출 전문종돈업체를 지정해 청정종돈과 유전능력이 높은 종돈의 수출을 유도하고 이들 업체에는 농업경영종합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시장 개척과 시장 다변화를 위해 수출용 종돈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한편 각종 박람회 참석과 해외시장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동남아시아 축산박람회에 참가하는 수출업체·단체에는 전시장 임차료 등을 실비 지원할 방침이다. **양도**